

한겨레신문의 강령과 심의실

김명걸

한겨레신문심의실장

I. 윤리강령의 제정

한겨레신문사 윤리강령은 신문의 창간 이전에 제정되었다. 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직원들은 1988년 5월 15일 창간호를 내기에 앞서 그보다 10일전인 5월 5일 윤리강령을 만들고 이의 실천을 다짐했다. 신문의 창간에 앞서 윤리강령부터 만들었다는 것은 한겨레신문의 제작과 운용을 윤리강령의 정신적 기초 위에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창간 이전에 이같이 윤리강령을 만들고 전사원, 특히 기자들이 앞장서 이의 실천을 다짐하고 나선 것은 한겨레신문이 이러한 윤리적 기초 위에 서지 않고는 그 창간의 대의를 실현해 낼 수 없다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한겨레 신문은 1975년 유신정권의 강압적인 언론통제에 맞서 자유 언론의 가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해직된 기자들과, 1980년 권력을 손안에 넣어가려는 작업에 몰두하던

군부세력의 언론장악기도에 저항하다 언론현장에서 내몰림을 당한 해직기자들이 힘을 합쳐

권력 앞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언론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언론매체의 창출을 역설하자 이에 공감한 다수 국민들의 호응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해직기자들은 물론 기존 언론사를 떠나 안정성이나 급여수준에서 불리한 여건의 이

신문사를 찾아 그 창간에 참여한 현역기자들도 한겨레신문을 통하여 추구하려 한 것은

오로지 권력의 강압을 이겨내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자는 데 있었다고 하겠다.

한겨레신문이 국민 각계로부터의 주식모금으로 재정적 기초를 다진 것은 어느 개인의

출자로 세워진 신문사가 갖게 될 권력 앞에서의 경영상의 취약성을 극복해 내려는 의도였다.

국민들의 열의가 집결됨으로써 경영과 관련된 일차적 목표는 달성되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고 언론에 주어진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기업적

측면에서의 합리적인 구조에 더해서 기자들을 비롯해 언론사 전 사원들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권력은 언론인을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관직금품 등으로 회유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순응하도록 만들어갔다. 한겨레신문의 윤리강령은 이같은 권력의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자기방어적 필요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언론인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의 산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윤리강령은 창간을 발의한 해직기자들이

제안하고 초안을 마련하는 등 그 제정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기자들을 비롯해 창간에 참여한

전 사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몇 개월에 걸친 각고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II. 가로 놓인 장애물 - ① 기자단

윤리강령은 제정에 뜻이 있다기보다 그 실천에 참뜻이 주어지는 것이며, 이를 실천에

옮겨가는 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가로 막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자단이 그 첫번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자단이 필요하고 유익한 조직인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선 기자단이 새로 창간되는 신문의 활동에 아주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적해도 무방할 것이다. 기자단은 폐쇄성과 배타성으로 해서 그의 긍정적인 역할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새 신문사에서 의욕을 불태우려는 기자들을 납득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윤리강령으로 무장하고 나선 한겨레신문의 기자들에게 기자실의 문은 완강하게 열려지지 않으려 했으리라는 사실을 기자단의 생리에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는 상상해내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자단을 해체하는 출입처가 생겨나는 등의 진통이 거쳐 갖고, 이제는 청와대 출입도 실현되어 기자만 가입이라는 문제는 오래 전에 현안으로서는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자단과의 모든 문제가 완전무결하게 해소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또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되리라는 전망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신문 기자가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더라」는 이야기가 간혹 들려오기도 한다. 기자들은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많아 보이는 비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나름대로 기자단과의 관계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심하면서 지혜를 짜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가는 것으로 믿고 싶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완전한 공감을 얻어내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한 때 심심찮게 들려오던 앞서와 같은 풍문이 점점 적어지더니 요즘에는 아주 듣기 어려워졌다는데 두고자 한다.

「출입처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기자단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한겨레신문은 추구하지 않는다. 타신문사 기자들도 관계되는 일에 관여할 수도 없거니와, 관여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기자들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고는 취재활동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현실을 외면만 하고 있기에는 안타까움이 있다.

III. 가로 놓인 장애물 - ②사회현실

윤리강령의 실천의지는 취재현장에서도 여러가지로 장애에 부딪힌다. 이른바 「촌지 문화」로 길들여진 사회에서 이질 문화권으로부터 날아든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게되다 보면 때로는 본분인 취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많다.

기자들의 취재대상이나 취재내용이 극히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어떤 분야라고 해서 매양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적어도 동일한 취재대상과 부단히 접촉하고 늘 상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어려움은 더욱 컸다. 기자들의 엄격한 자기통제가 상대방에게는 인격이 결여된 기계적인 인간상으로 비춰지고, 이로 인한 대화의 단절이 기본 업무인 취재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 언론사라면 크게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신생 신문사로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위에 더해지는 어려움으로 감당해 내기에는 괴로운 과제였다. 기존 언론사 기자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새로운 기사를 찾아내려는 의욕에 찬 기자들에게 이 같은 상황들은 실망을 안겨주고 발길을 무겁게 해주었다.

그러나 윤리강령의 무용론이나 포기론이 제기되지는 않았다. 기자들은 윤리강령을 만들면서 가다듬었던 결의를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하게 지켜주었다. 시일이 흐르면서 기자들의 이러한

자세에 대해 사회가 이해의 폭을 넓혀가게 되었고 따라서 기자들의 어려움도 그와 비례해 줄어가는 모습이다. 한겨레신문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윤리강령을 지킨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감으로써 이러한 여론은 한겨레신문의 이미지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따라서 단기간에 한겨레신문이 일정수준의 독자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V. 윤리강령과 심의실

한겨레신문에서 윤리강령의 실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는 심의실(심의위원회 포함)과 윤리위원회가 있다. 먼저 심의실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심의실은 기사를 심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후의 지면에 반영하여 언론 본연의 진실한 보도와 건전한 비판기능을 수행토록하는 일을 한다. 일상적인 판단을 요하는 작업은 심의실에서 담당하고, 사안이 중요하거나 심의실에서 판단키 어려운 사항은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심의실에 상근하는 위원이다. 비상임위원은 편집위원 2인, 논설위원 1인, 편집국 기자 3인, 제작국 판매국 광고국에서 각 1인 등 9인이다.

심의실은 그 동안 필요성은 인정해 오면서도 감량경영의 취지에 따라 미루어 오다가 지난 10 월에야 출범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과정에 있으며, 1991 년에야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의 결한다.

심의실의 출범으로 이제까지 윤리위원회가 홀로 수행해 오던 윤리강령과 관련된 업무를 일부 심의실이 맡아 하게 될 것이다. 심의실은 신문에 게재된 기사, 만화의 공정성, 시의성, 신속성, 정확성, 그리고 기사 구성의 적정성 등을 심사분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윤리강령에 어긋난 사유로 취급된 기사는 공정성이나 적정성에서 지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상벌의 필요가 있어 인사위원회에 그 처분을 건의하게 될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토록 되어있다.

윤리강령과 관련해 심의실이 맡게 될 업무영역은 신문에 기사화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또 해당 기사가 공정성이나 적정성에서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논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러므로 심의실은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한 간접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직접적인 기능은 윤리위원회에 주어져 있다.

V. 윤리위원회의 출범

한겨레신문에는 윤리강령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윤리위원회는 1989년 3월에 출범했다. 창간하고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윤리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윤리강령의 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기구의 필요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윤리위원회는 편집국에서 편집위원 1명과 기자 2명 등 3명과 임원회, 논설위원실, 제작국, 광고국, 판매국, 관리국(운영 기획실, 감사실 포함)에서 각 1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그 결의에 따라 ① 주의 환기 ② 위원장 경고 ③ 위원회 경고 4 인사위원회에 징계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제까지 그러한 결의를 한 사례는 없다.

VI. 윤리위원회의 활흔

윤리위원회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정기회의를, 그리고 위원장이 심의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갖는다. 그 동안 윤리위원회가 논의하고 심의한 사항에 대한 통계나 분석을 하는 작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그동안의 활동에서 두드러진 것을 든다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출장에 대한 허용여부, 그리고 선물이나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이를 돌려주거나 고아원 양로원 등에 전달하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해외출장은 이를 부담해 주는 후원자가 있게 마련이다. 이 후원자는 권력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출장은 해외출장이건 국내출장이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윤리강령실천요강(제 4 항의 2)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규정 자체가 「부득이한 경우」라는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할 사례들이 적지않게 나타났다는 데 있다. 한동안 윤리위는 회의를 가질 때마다 상정되는 의안이 어느 기자의 해외출장 계획이 윤리강령의 기준으로 보아 용인될 수 있는 것이냐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었고, 윤리위는 마치 이 문제만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는 느낌을 줄 만큼 자주 상정되었었다.

사정이 이같이 된 것은 이러한 해외출장을 여러가지 고려 끝에 허용해 주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혹 중요한 기사꺼리가 있을 가능성이 예견된다든가 또는 그 출장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이 그 기자의 앞으로의 취재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갖게 되는 경우가 그러했다. 이러한 경우 국내출장이라면 회사가 경비를 부담해 간단히 해결했다. 그러나 해외출장은 그와 같은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일행과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참여 자체를 포기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지게 되자 윤리강령의 실천의지가 퇴색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탄의 소리가 회사 내외에서 일게 되었고, 윤리위는 이러한 여론을 수용해 비록 기사를 놓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예외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꿔가고 있다.

VII. 윤리강령의 앞으로의 과제

기자들이 윤리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은 기자들 자신은 물론 이들이 발붙이고 있는 토양인 사회도 병들어 있다는 사실의 간접적인 시인이다. 이 땅의 언론은 병든 사회풍토에 영합하면서, 이를 정화해야 하는 과업에 충실하기는커녕 병을 더 심화시키고 구조화해 가는 일에 조력해 왔다는 비판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다. 한겨레신문 탄생의 뜻을 이러한 언론풍토에 대한 반성에 둘 수 있다면, 한겨레신문의 윤리강령은 그 반성문이며 기도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독한 자기 성찰을 다짐하는 비밀스런 글이 아니라 나와 이웃에게 알리고 서약하는 선언문과 같은

것이다. 윤리강령이 얼마나 지켜지는가에 대한 신문사 밖의 평가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같이 사회에 대해 공약을 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같은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윤리강령은 명칭 그대로 기자가 지켜야 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면 윤리위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그 실천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윤리강령과 윤리위원회규정이 윤리강령의 규범적 측면에 착안해서 벌칙을 적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한번도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강령은 실천을 다짐하는 선언임으로 이는 완성의 날이 없는 영원한 실천과제일 뿐이다. 언론풍토가 이를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사회통념이 이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게 되는 날까지 윤리강령은 한겨레신문과 함께 할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법과
- 동아일보 사회부기자,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현재 한겨레신문 심의실장